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12월 5일(목) 13:00~

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



주관·주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추진배경

-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와 쟁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 마련

□ 일시/장소 : 12월 5일(목) 13:00~ /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

□ 주관·주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 세부 일정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등록 및 개회	13:00~13:30(30')	<등록>
	13:30~13:45 (15')	○ 개회식 - (개회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최승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13:45~14:00(15')	○ 업무협약식(MOU) 및 기념촬영
발제	14:00~15:30 (90')	○ (주제1)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전략 - 발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 ○ (주제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통한 농산어촌소멸 대응 - 발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례1) 온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 ON 돌봄사업 농어촌 활력을 ON 하다 - 발제: 이재영 충북 증평군 군수 ○ (사례2)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 발제: 신애정 강원 정선군 보건소장
휴식	15:30~15:40(10')	휴식 및 토론 준비
패널 토론	15:40~17:00 (80')	○ 좌장 :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 ○ 패널 : 최승준 강원 정선군 군수(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김주수 경북 의성군 군수(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고문) 김상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과장 홍근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과장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마무리	17:00~	마무리 및 장내 정리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주제 1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전략 .. 1**

－ 발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제 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통한 농산어촌소멸 대응 23**

－ 발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례 1 **온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 ON 돌봄사업,
농어촌 활력을 ON 하다 43**

－ 발제: 이재영 충북 증평군 군수

사례 2 **공공보건의로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57**

－ 발제: 신애정 강원 정선군 보건소장

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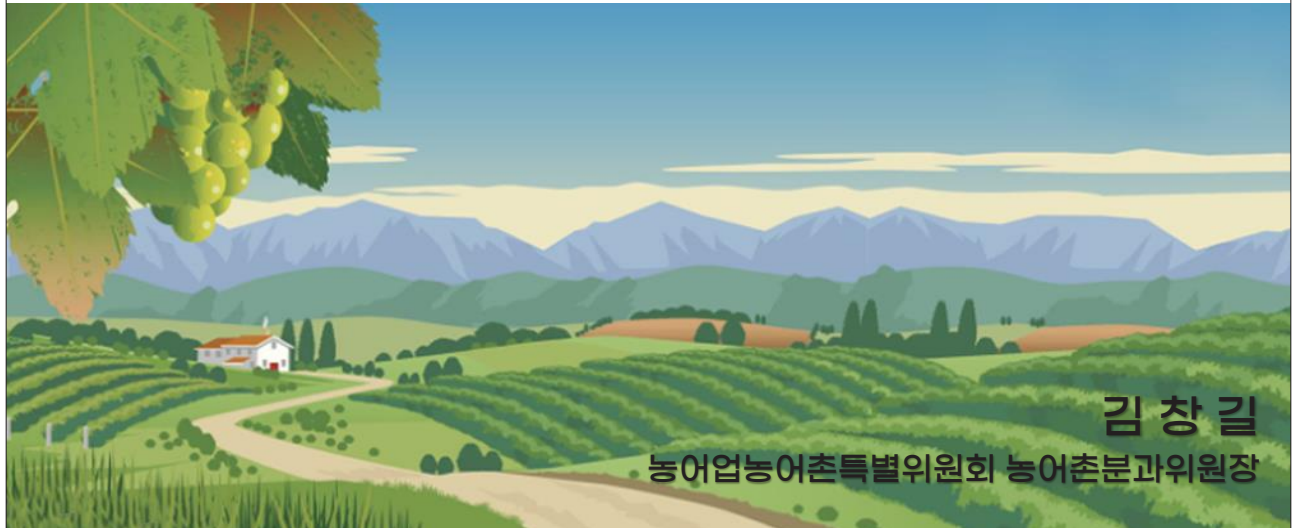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전략

발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

농산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2024. 12. 5)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 전략



김 창 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ABOUT SPEAKER

김창길 박사

changgil@snu.ac.kr

-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 ▶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전)서울대 농경제학부 특임교수
- ▶ 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 전)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 ▶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농촌·산촌·어촌이란?



- ▶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리적 공간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거주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 읍·면의 지역
- 읍·면 외의 지역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39개 시군, 1404개 읍면



- ▶ 산림 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청정한 자연에서 교육·휴양·치유 활동 등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지역

<산림기본법 제2조>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06명/km²)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9.7%)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어촌·어항법 제2조>

- 읍·면의 전지역
-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4개 시군, 492개 읍면

2



농산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 전략

I 소멸 위기 대응 농산어촌 뉴빌딩 개념

II 농산어촌의 여건변화 진단

III 농산어촌 뉴빌딩의 접근방법과 과제

IV 결론



1. 지방소멸의 개념

■ 지방소멸(local extinction)의 유래와 의미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마스다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이란 용어 유래함
 - ※ 2014~2040년에 현재 인구감소 추세라면, 20~39세의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해 지역의 재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방소멸 지역으로 지칭함. 일본의 시구정촌 가운데 49.8%에 달하는 869개의 지역(마스다 리스트)이 소멸지역에 해당 된다고 함
-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 도시화 진전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현상
(하혜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자치 재검토.” 한국지방행정학보, 2017)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되는 현상
(차미숙 외 2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2)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
(박진도, “지방소멸론: 실체, 비판, 대안.” 「시전집중 GSnJ 제31호. 2023. 9, p.2)

■ 인구감소지역의 개념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2. 한계마을과 농산어촌 소멸의 개념

■ 한계마을의 개념

- 1990년대초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오노야끼라(大野晃)는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촌마을의 고유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한계집락)로 정의함
- 농촌마을이 소멸에 이르기 직전 상태의 마을로,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등 4가지로 구분함

■ 농산어촌소멸의 개념

- 농촌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농업 활동이 위축되며, 자연환경 관리가 소홀해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

■ 지방소멸과 농산어촌소멸의 차이

- 지방소멸은 수도(서울시)이외 지역을 대상(대도시와 중소도시)으로 하며, 농산어촌소멸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함



※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84개가 농촌지역으로 농촌소멸의 위기 부각

6

3.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시각

■ 지방소멸(농산어촌소멸)의 위기감 고조와 적절한 해법모색 시급

- 지방소멸의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절박한 자세로 다차원적 적절한 해법이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시각

■ 일본에서 개발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그 어감이 주는 파급력에 빠르게 확산했지만, 이를 비판 없이 국내 적용은 무리라는 시각

☞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시각

(박진도, 지방소멸론: 실체, 비판, 대안. 시선집중 GSnJ 제311호, 2023. 9)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일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은 소멸하지 않으며, 농촌여건이 나아지면 전원회귀는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임
- 지방소멸론은 광역 및 거점개발 중심의 사고이므로 지역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소도시 및 읍·면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임

☞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 피력

(오다기리 토쿠미.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울아카데미, 2018)

-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거점도시를 '인구 댐'으로 만들고, '압축도시(컴팩트시티)'로 축소·정리하자는 주장으로 농산촌 철수론과도 같은 맥락임

7

4. 농산어촌소멸의 대체 용어

- ▶ 농산어촌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농산어촌 소멸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해법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용어 필요
 - 농촌부흥, 농촌증흥, 농촌진흥, 농촌활력, 농촌역주행, 농촌재생(regeneration), 농촌활성화(revitalization)
 - 농촌창생, 농촌역주행, 농촌리뉴얼(renewal), 농촌리부팅(rebutting) 농촌뉴빌딩(new building) 등의 용어가 제안되고 있음.

➡ 농산어촌 소멸의 대체 용어로 **농산어촌 뉴빌딩** 사용

※ 일본은 지방활성화 방안에서 ‘지역창생’(regional revitalization)이란 용어를 도입

- 창생(創生)은 ‘새롭게 만들다’는 의미로, 지방이 근본 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임
- 지역창생은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기 보다는 그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실행을 통해 그 지역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8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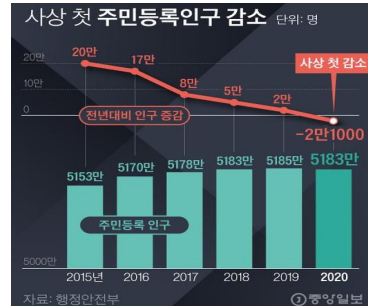
농산어촌의 여건변화 진단

1. 인구감소 시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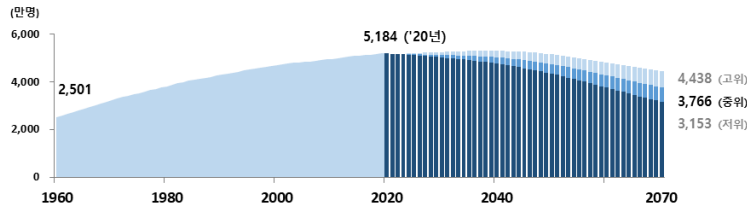
■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 경험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 2020년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함
- 시·군·구 단위로 전체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¼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

※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총인구의 변동 전망치(1960~2070), 통계청>



2020년 5,184만명
2030년 5,120만명
2040년 5,019만명
2050년 4,736만명
2060년 4,262만명
2070년 3,766만명

10

2.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50.7%(2023년 기준)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도시 인구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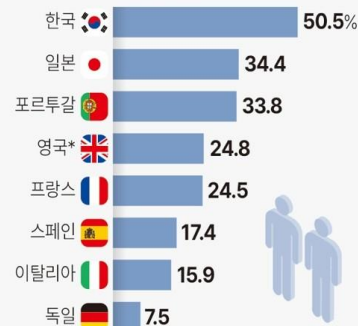
-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7개 OECD 분석대상 국가중 1위 (한국은행, '지역간 인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2023. 11)

<수도권 인구변화 추이>



주요국 수도권 인구비중 현황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연말뉴스 * 201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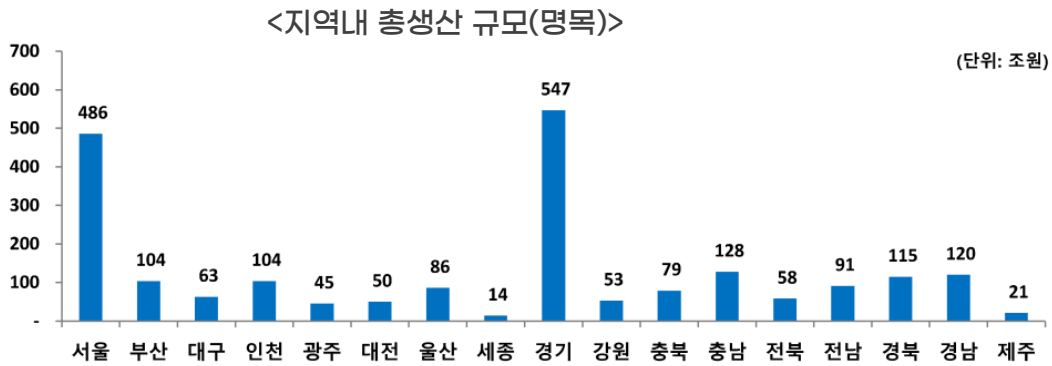
김민지 기자 20231102

YONHAPNEWS

11

2.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심화

-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2,166조원, 경기 547조원, 서울 486조원, 인천 104조원으로 수도권이 52.5% 차지



자료: 통계청,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 p.1.

-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49개가 수도권 위치(2022년 기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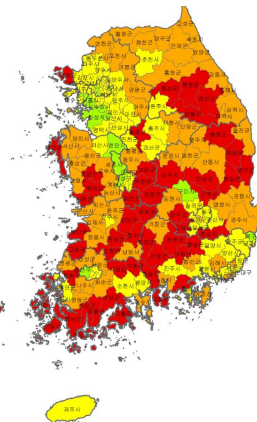
3.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위험지역 증가세 지속

- 전국 228개 시군구의 51.8%인 1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
- 읍면동 단위로 보면 소멸위험지역이 1,971개로 54.5%를 차지
소멸위험진입(4단계)이 778개, 소멸고위험(5단계)이 1,173개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2023. 2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분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	0	(0.0)	0	(0.0)	166	(4.6)
2	1	(5.9)	17	(7.5)	328	(9.2)
3	10	(58.8)	93	(40.8)	1,135	(31.7)
4	6	(35.3)	67	(29.4)	778	(21.7)
5	0	(0.0)	51	(22.4)	1,173	(32.8)
소멸위험지역 소계	6	(35.3)	118	(51.8)	1,951	(54.5)
전체	17	(100.0)	228	(100.0)	3,580	(100.0)

주: 1단계는 소멸위험이 매우 낮음, 2단계는 소멸위험 보통, 3단계는 주의단계, 4단계는 소멸위험 진입단계, 5단계는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4단계와 5단계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3).



- 농촌 139개 시군의 1,404개 읍면중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51.7% 차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 지역공동체 기반 붕괴, 빈집·유허시설 증가, 지역경제 악화·불균형 심화

13

4. 농산어촌 인구의 새로운 트렌드

■ 새로운 정주 및 경제활동 공간으로 농산어촌 역할 조명

- 도시민의 귀농·귀촌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경제활동 장소로서도 의미
 - 가용 토지나 자원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저밀도경제(low density economy)를 기반으로 농촌형 경제활동 확산 경향이 뚜렷함

※ 저밀도 경제란 경제 활동과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인구 밀도가 낮고 자원, 인프라, 경제 활동이 분산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며,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성장이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OECD, 2016)

- 농촌지역의 농식품분야 신규 창업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 농촌 소재 농식품 분야 사업체의 연도별 신규창업 건수
: 3,296개(2010) → 4,277개(2015) → 7,477개(2020)

- 농촌을 활동 무대로 버킷리스트를 실현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농촌소멸로 도시민의 버킷리스트 실현이 제약받는다면 국민 행복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촌에서 5년 내 버킷리스트 실현을 준비 중인 도시민 비율
: 13.9%(2019) → 14.6%(2023), (KREI, 2019, 2023)

14

4. 농산어촌 인구의 새로운 트렌드

■ 관광 및 치유공간으로 산촌과 어촌의 역할 중요

- 건강, 삶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 산림복지이용 인원 증가: ('17) 2,219→('20) 1,168→('22) 2,345만명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자료: 산림청, '제2차 산림복지 진흥계획(2023~2027)', 2023. 5, p.22.

-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객 다변화, 어촌 ESG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수: ('20) 96만명 → ('23) 144만명; 체험소득 ('20) 170억원 → ('23) 202억원 증가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2023. 12. 19일자 보도자료

15

[III]

농산어촌 뉴빌딩의 접근방법과 과제

1. 접근방법

■ 농산어촌의 역할 재정립

- 농산어촌은 농어업 생산을 위한 거주를 넘어 도시민의 관광과 체험, 휴양,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재편
- 도시민이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통해 정기적 방문, 업무처리 등을 위한 체류 공간으로 농산어촌의 전략적 활용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귀농·귀어·귀촌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사람→공간(농산어촌 마을)의 선순환 확립

■ 농산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긴요

- 발상의 전환을 위해 남들과 다르게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1. 접근방법

■ ‘OECD 농촌정책 3.0’의 적극 활용

- 농촌은 쇠퇴의 지역이 아니고 성장과 기회의 장소로 활용
 - 농촌이 보유한 천연자원, 비옥한 토양, 경관, 관광, 문화 등의 농촌자원 활용
 - 농촌지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 OECD의 농촌정책 3.0 적용(3대 분야 11개 원칙)

- OECD 회원국(북유럽국가)의 농촌지역이 각국의 국가경제 회복을 견인(OECD, 2016)
- 농촌지역을 도시 근접성에 따라 기능적 도시지역내 농촌지역, 근거리 농촌지역, 원거리에 위치 농촌외곽지역 등으로 유형별 접근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농촌-도시간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농촌-도시들의 연계한 협력시스템 구축
-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지역 구분을 지양하고, 도시와의 연계와 상생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기업가 정신 고취
- 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복원력 강화
- 농촌정책 대한 범정부적 접근

18

농식품부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2023. 3. 28)

▶ 비전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 주요 추진전략

- 농촌공간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 청년, 혁신가, 기업 등을 위한 경제 기회 창출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및 기반 조성
- 농촌 경제·체험·거주 기반 마련으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산촌 관광 활성화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관계부처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주거, 일자리,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9

비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목표	◇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 ('23) 21.4% → ('27) 22.0 ◇ 농촌지역 생활인구 · 관계인구 늘리기	
전략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대전환	
	전략1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전략2 농촌 체류 · 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전략3 주민 · 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원칙	자율, 연대 · 협력, 융복합, 규제혁신	
세부 과제	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청년, 혁신기 기업 등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획발전특구 농 · 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②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 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 · 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③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 주거, 일·리, 서비스가 갖춰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교육 · 문화 서비스 다양화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추진 기반	농촌공간계획, 농촌소멸위험지수,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

해수부 -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2024. 5. 13)

▶ 비전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주요 추진전략

• 전략1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 어촌·어항 기반 바다 생활권: 민간투자 유치 확대
- 도시형 바다 생활권: 부산, 인천 등 →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 지역형 바다 생활권: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

• 전략2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 스마트·자동화 혁신으로 수산업 매력제고
- 어촌계 어장 활용 수산업 일자리 개방
- 청년 등 신규 인력 진출 확대
(‘22년 1,256명 → ‘27년 1,800명)
- 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 소득 증대

• 전략3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

- 어촌에서 즐기는 체험 여행
-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 쉼터
- 해양레저 · 관광 연계로 머물고 싶은 여행

• 전략4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 주거·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의료·교육·정주여건 등 복지체계 개선
- 국민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

21

행정안전부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3.1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최초의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

▶ 비전과 목표

-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제고'로 제시

▶ 추진기반: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 공고화

- 전략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 지원
- 전략 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 비대면 진료 및 거점의료기관 확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 전략 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

22

2. 추진 방향과 과제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9차 위원회(2023. 12. 13)에서 심의 의결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안' 자료를 기초로 보완한 것임

목표	삶과 일과 쉼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만들기	
방향	▪ (사람):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일자리): 농산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공간): 국민이 쉬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으로 조성	
추진과제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1)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2) 도시·농산어촌 교류의 확대 (3) 치유산업의 전략적 활용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4)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5)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6) 지역특화자원 기반 기술고도화로 저밀도경제 활성화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7) 다지역 거주 확대 (8) 체류형·체험형 농원 확대 (9) 농산어촌다움 복원

23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1)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 ▶ 농림어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도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같이 취·창업 준비 단계와 창업 실행 단계를 구분하여 농산촌형 비즈니스 패키지의 맞춤형 지원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등과 같은 패키지 지원 수단을 활용하여 일자리, 주거, 혁신적 생활서비스, 지역사회 활동 등 분야별 지원 시책이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
- ☞ 농협의 청년 유입을 위한 활동
 - 청년농부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과 애그테크 창업교육 확대, 금융지원
 - 유희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청년창업지원 시설로 활용 (순천농협 청춘창고)



- ▶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한 시·군별 '농산어촌 뉴빌딩 지원단(가칭)' 구성·운영 지원
 - 농림어업 생산·가공·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인력의 농산어촌 생활 정착, 삶의 질 제고, 비즈니스 지원 등 각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빙랩 방식의 '농산어촌 뉴빌딩 지원단(가칭)' 프로젝트 추진

24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2) 도시·농산어촌 교류의 확대

- ▶ 도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활용
 - 농산어촌 지역단위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용
 - 농산어촌지역과 도시민의 사전 교류프로과 도농상생 힐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
 - 출향도민증·디지털(관광)주민증을 활용한 주요 방문지 할인 제공 등 지역방문 유도
 - 농산어촌마을과 도시민(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해 생태적 공존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 일본 군마현의 가와바마을의 성공사례

- 1980년대 '제2의 고향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가와바마을과 세타가야구청간의 자매결연
 - 61개 공립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정규 학습과정으로 2박 3일 농촌체험 학습 운영
- 세타카야구 주민(94만명) 가운데 연간 가와바마을 방문자 6만~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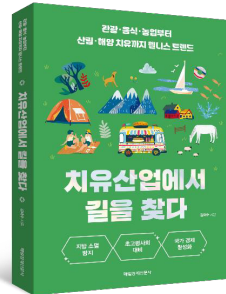
25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3) 치유산업의 전략적 활용

- ▶ 치유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의 확대
 -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긴장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이 대두
 - 치유는 농업, 산림,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의료, 요양 등과 연계한 융합산업으로 농림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 필요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의 연계 추진
 - ※ 치유산업: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 범부처 연계를 통한 체계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 민간 협력으로 자립가능한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중심의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지역 치유산업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산업과 기존 치유시설을 연계한 권역설정



26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4)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 ▶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림어업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자원 활용을 통해 취·창업, 사회 서비스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산어촌 자원 활용 취·창업, 사회 서비스 공급 관련 취·창업, 치유산업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취·창업 등 고려
- ▶ 기업 유치를 통한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
 - 중앙정부: 유치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지원대책 필요
 - 지방정부: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인력확보 지원대책 마련 필요
- ▶ 기업 활동과 지역발전 연계 전략 추진
 - 기업이 농산어촌지역과 지역발전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일정액을 지원
 - 기업이 주도적으로 물적·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보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7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5)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 ▶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농산어촌 지역 여건에 맞도록 운영
 - 농산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인큐베이팅·펀딩·제도적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가 집적될 수 있도록 육성
 - 지역 내 유희시설 등을 개조, 기업 지원 서비스 공유, 예비창업자 교육 강화 및 창업지원금융 확대, 규제 완화 특례 제공 등
 - ※ 기회발전특구는 소득 법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신속, 확인·실증 특례, 임시허가),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패키지 지원 제도
- ▶ 경제 여건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 자본소득 과세면제, 재정지원 및 저리 금융지원으로 농공단지 기업, 개별입지 기업 등 시설 개선 촉진
 -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간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에게 과세 면제, 금융 지원으로 투입한 자본은 중장기적으로 100%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장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혁신 내용을 담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 농산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로 신청하는 경우는 일부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

28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6) 지역별 특화자원에 기반한 기술 고도화로 저밀도경제 활성화

- ▶ 지역별 특화자원에 기반하여 특화산업 기술 고도화 등 전문화를 추진하고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농산어촌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역량 결집 필요
- ▶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협력하고, 신규사업 검토로 농산어촌 활력을 제고할 필요
 - 기존의 정책사업을 통해 발굴·조직된 민간활동가, 사회적 경제조직, 액션그룹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및 소득향상에 기여 가능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속 또는 연계사업으로 신규사업 도입 검토 필요

29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7) 다지역 거주 확대

- ▶ 4도3촌형 생활을 농산어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고, 국민 행복도 제고 기여
- ▶ 청년, 귀농·귀촌·귀어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형 임대주택 조성 및 공급 추진
- ▶ 유희시설 등 활용하여 위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지원
- ▶ 농산어촌 임대주택 및 세컨하우스 보유에 대한 세제 특례 강화
 - (취득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주택을 배제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 합산 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산어촌 주택을 다주택 수에서 제외할 필요
 - (양도세) 농산어촌 신규 주택 취득 후에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
 - (기타) 농산어촌형 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필요

30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8) 체류형·체험형 쉼터 확대

- ▶ 한국형 다차(Dacha),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여 농산어촌의 체류 확대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 사용기간 12년후 추가 사용 허용
 -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 야외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
 - ※ 러시아의 경우 주말이나 다른 패턴으로 시골지역에서 여름 거주자인 다차(전통적인 시골 휴식 세컨하우스)를 도시 가구의 약 45% 소유
- ▶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소규모 거주 공간, 주민과 교류 체험 프로그램, 텃밭, 쉼터 등으로 구성
 - 농촌마을 인근 유희시설(폐교 등) 활용하고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공용 부대시설로 주거 일체형 텃밭, 공동텃밭, 관리동, 공용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중앙정원, 운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



31

2. 추진 방향과 과제

<체류형 쉼터·농원의 주요국 사례>

<한국 - 농촌 체류형 쉼터>



<독일 - 클라인가르텐>



<러시아 - 다차>



32

2. 추진 방향과 과제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9) 농산어촌 다움 복원

- ▶ 농산어촌 마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산촌·어촌 다움 보전 및 개선 활동을 발굴·확산
- ▶ 농산어촌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온 마을숲, 마을도랑, 마을산, 마을정원 등 자산을 활용하고, 농산어촌다움 보전·개선을 병행
 - 개발 위험으로부터 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주민 스스로 경관조례 제정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 마을)
- ▶ 세계·국가중요농어업유산 이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농림업유산 보전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유도
- ▶ 농산어촌 자산 조사,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 활성화, 자발적 보전·관리 활동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국민 참여형 농산어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추진
- ▶ 농산어촌진흥 컨설팅을 통한 주민주도 농산어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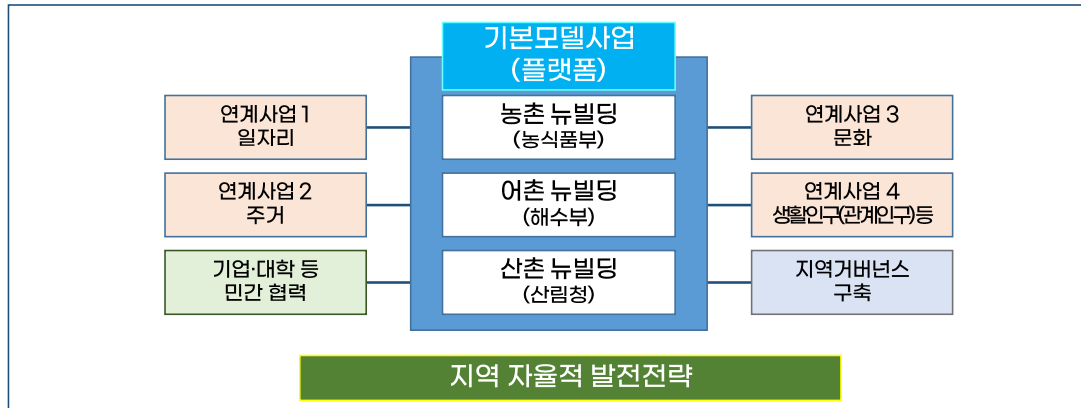


농산어촌 뉴빌딩을 위한 핵심과제

- ▶ 농산어촌을 위기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뉴빌딩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이 긴급(OECD 농촌정책의 핵심)
 - 농산어촌과 도시를 연계한 협력시스템 구축
 - 농산어촌 뉴빌딩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추진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단계별 실행프로그램 수립하고, 적절한 자원확보와 함께 세제혜택 등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 ▶ 농산어촌 소멸 위기 대응 농산어촌 뉴빌딩을 위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함께 농산어촌-도시 파트너십의 확대 및 치유산업의 전략적 활용
- ▶ 농산어촌 뉴빌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혁신적인 홍보와 미디어의 전략적 활용

농산어촌 뉴빌딩 다부처 통합사업 제안

▶ 농산어촌 뉴빌딩을 위한 다주체 통합 시범사업 개념도



- | | |
|---------|---|
| 방향 | ▪ 지자체 자율적 농산어촌뉴빌딩을 위한 ‘제3의 혁신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 |
| 역할 | ▪ 지자체 계획 바탕 시범지역 선정
▪ 관계기관(농어촌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어촌어항공단), 기업, 전문가 등 연계 지원 |
| 내용 및 방식 |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농산어촌 뉴빌딩 프로젝트 도입
▪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기업, 단체의 자원을 대상지에 제공·연계 |

36

감사합니다



주제 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통한 농산어촌소멸 대응

발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통한 농산어촌 소멸 대응

2024.12.05.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표내용은기관 공식의견이아닌 연구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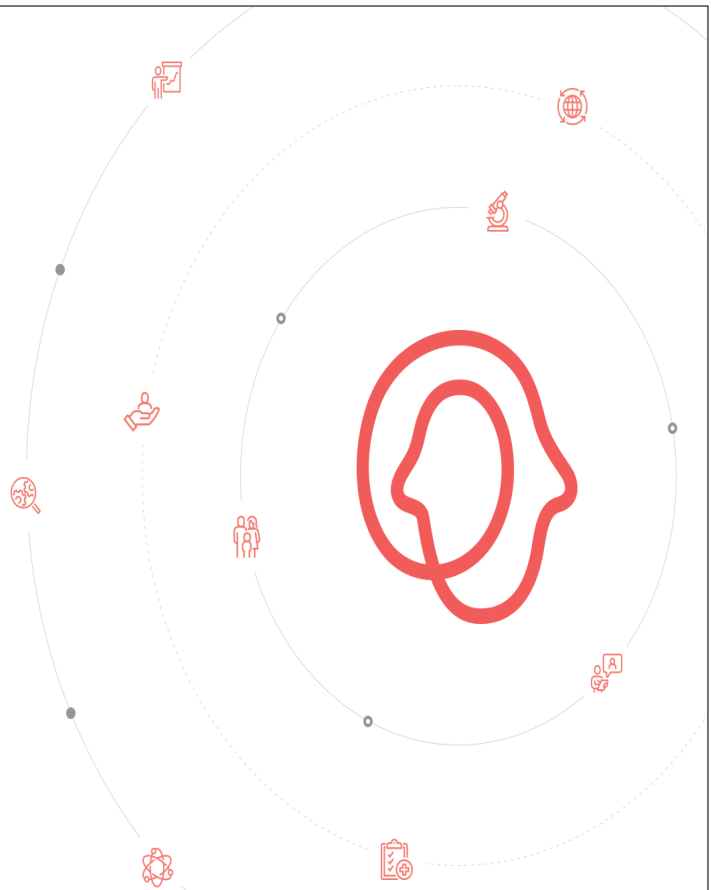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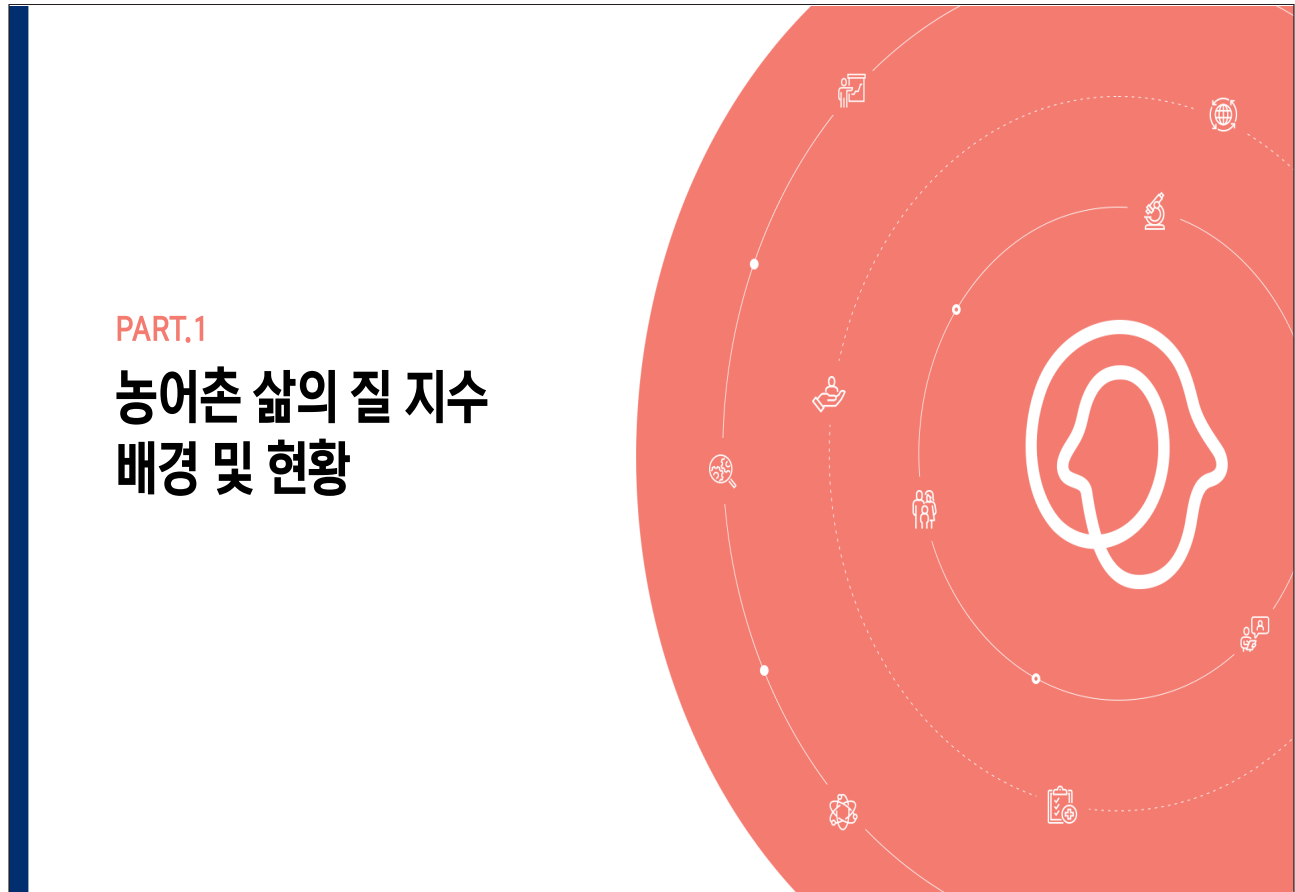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PART.3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농산어촌 활성화방향





PART.1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배경 및 현황



01. 삶의 질 지수 논의 배경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통합 이후 **농어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협력적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 농촌 대상 삶의 질 기본계획 현황과 성과
 - 농어업,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파악과 변화를 위한 지표 체계 구축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성 원칙, 세부 지표 구성 방안의 제시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검토·개선, 운영 체계 구축안 제시 및 과제 발굴 등 향후 발전방안 마련
 - 지속 가능한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지표 및 지수구축을 위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구축
- 농어업위 중심으로 두차례 연구용역 수행(2022.10-2023.10)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 체계 구축 연구(김태완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연구(한이철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기본 방향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축 목표와 항목

● 구축 목표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되고, 직접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구축
-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책평가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 역할 수행

●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분류를 기반으로 15개 세부지표로 구성

- 5개 분류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으로 구분

03.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체계 : 지표체계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성 영역과 항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 항목(보사연 안)			
분류	세분류	정의	측정단위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Key Indicator)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GDP)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시군구
	고용률	만15세이상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시군구
	시군구 기업체 수	시군구별 사업체 수	시군구
	교통접근성지표	집계구 중심에서 서비스 시설까지 통행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시간 대별로 측정하여 지표화(생활시설)	시군구
보건·복지	자살사망률 (Key Indicator)	매년 지역 내 자살사망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연령 15 미만 제외)	시군구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시군구
	건강복지지원건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건수	시군구
	보건복지예산비율	지자체 당해연도 전체 예산중 보건 및 복지예산이 점유하는 비율	시군구
문화·공동체	삶의 만족도 (Key Indicator)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광역·시군구
	문화여가 시간	주당 평균 여가활동 시간	시군구
	사회적 네트워크	도움이 필요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는 비율	광역·시군구
	가사분담비율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	광역·시군구
환경·안전	빈집(Key Indicator)	빈집(주거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비율	시군구
	인구인당당 5대 주요 범죄 발생건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	시군구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양	시군구
	합계출산율 (Key Indicator)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시군구
지속가능	인구순이동	인구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인구·하위지표로 연령 혹은 성별 순이동률 고려	시군구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시군구

자료: 김태완 외(2023).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연구. 농어업위. 보사연(재인용)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핵심지표는 5개 분류 체계내에서 하나씩을 선정

- 경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보건·복지는 “**자살 사망률**”, 문화·공동체는 “**삶의 만족도**”, 환경·안전은 “**빈집**”, 지속가능성은 “**합계출산율**”로 설정

- 여기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소득을 대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득 변수가 현재는 시군구별로 발표되고 있지 않아 동 변수를 대리 변수로 활용

- 기타 네 개의 핵심지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삶의 모습과 향후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03.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체계 : 지표체계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구성 영역과 항목(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 항목(농경연 안)			
영역	기준안	수정안	자료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인당 지역내 총생산	통계청 국민계정
	고용률	고용률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현명당 사업체 수	시군구 사업체 수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통계청 재정자립도 현황
보건·복지	자살사망률	자살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기대수명	기대수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기대수명
	간급복지지원율	간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부 행정자료
	보건복지예산비율	보건복지예산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문화·공동체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문화여가 시간	문화시설 접근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활동 참여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사분담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환경·안전	빈집율	빈집율	통계청 빈집비율
	지역안전도	지역안전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현황
	하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한국환경공단 하수도 통계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처리량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처리량	자원순환청보시시스템 지역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지역회복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순이동	인구증감률	통계청 주민등록총인구
		청년인구 비율	통계청 주민등록총인구
	교통접근성	교통접근성	교통통계

자료:한이철 외(2023).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 및 모니터링 모델 마련 연구. 농어업위, 농경연(재인용)

- 2차 연구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일부 항목 수정
- 문화공동체에서 “문화여가시간→문화시설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사회활동참여율”, “가사분담비율→가족관계 만족도”
- 지역회복에서 “인구순이동→인구증감률 및 청년인구 비율”로 전환 및 추가 지표 선정
- 시군구별 지표 산출을 위해 변경 : 자체 조사 배제 (객관적 지표 활용)

7

0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주요 결과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결과

● 평가 대상 지역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화 된 10개 지역(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청주시, 남양주시, 천안시, 김해시, 평택시, 포항시, 세종시)은 제외하고, 총 129개 농어촌 시군을 ‘농어촌 군’ 79개와 ‘도농복합시’ 50개로 구분하여 상위 20% 지역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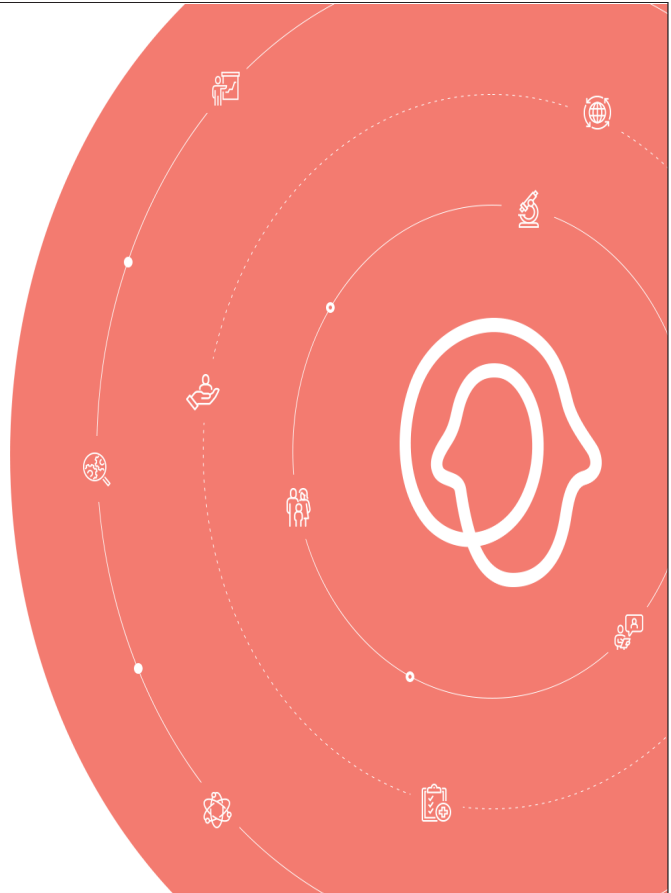
● 주요 평가 결과

- ‘농어촌 군’ 79개 지역의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는 평균 39.06점이며, 울릉군(54.73점), 옹진군(50.98점), 청양군(49.30점), 인제군(47.23점), 양구군(46.81점) 순으로 우수
- 농어촌 군 지역의 영역별 우수 지자체로 ▲경제는 울릉군(50.73점), 진천군(44.61점), 음성군(43.54점)이며, ▲보건·복지는 양평군(61.81점), 울릉군(61.34점), 옹진군(59.26점)순이었다. ▲문화·공동체는 홍성군(81.95점), 서천군(81.94점), 강화군(80.20점)이고, ▲환경·안전은 진안군(88.27점), 장수군(82.57점), 군위군(80.92점)이었다. ▲지역회복력은 증평군(69.21점), 진천군(59.87점), 무안군(57.23점) 순

8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01. 경제영역 : 지표설명

✓ 경제영역 지표 및 내용

농어촌 삶의 질 지수 : 경제영역	
구분	내용
경제영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정의 - 지역경제의 순환과 구조를 생산, 판매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측정 -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의 합으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
	출처 - 통계청 국민계정 내 시군구 GRDP 자료로 연간 1회 시군구 단위 지표를 제공
	고용률
	정의 - 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별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고용률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많고, 소득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측정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지표를 제공
	시군구 사업체 수
	정의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예방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정 - 시군구별 사업체 수
	출처 -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자료로 연간 2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재정자립도	정의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임.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자체적 지역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에 활용
	측정 -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출처 - 통계청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자료:농어업위(2023). 농어촌삶의 질 지표. (재인용)

- 경제영역의 지표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 지역내 경제현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정도를 평가
-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인구로, 소득, 소비 등의 기준이 됨
- **시군구 사업체수** : 지역내 생산활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평가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며, 지역경제 및 생활여건 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 요소

01. 경제영역 : 현황

✓ 지역 격차 지속

-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경제, 사회 등 지표가 변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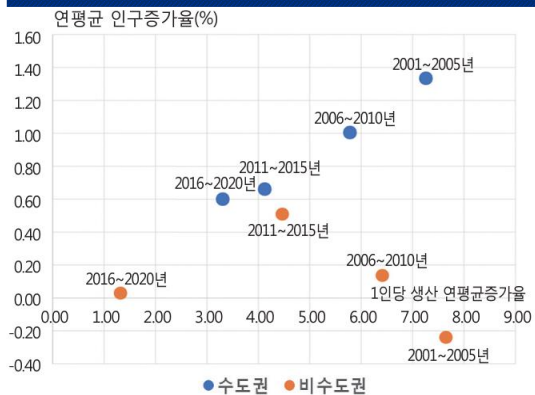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는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예, 주거, 교육, 문화, 건강, 삶의 질 등)

특정지역 중심의 경제사회발전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면적(2021년)	12.1%	87.9%	1,000대 기업 수(2020년)	86.9%	13.1%
인구(2021년)	50.3%	49.7%	GRDP(2020년)	52.5%	47.5%
청년(20~39세)인구(2021년)	55.0%	45.0%	1인당 GRDP(2020년)	37.1백만원	34.1백만원
취업자 수(2021년)	50.5%	49.5%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 (2021년)	75.6%	24.4%
사업체 수(2019년)	47.0%	53.0%	주택매매가격(중위단위값) (2022년 6월)	6,460천원	2,142천원

자료: 김현우 외(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월간산업경제 286호, 산업연구원, 재인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및 생산성 변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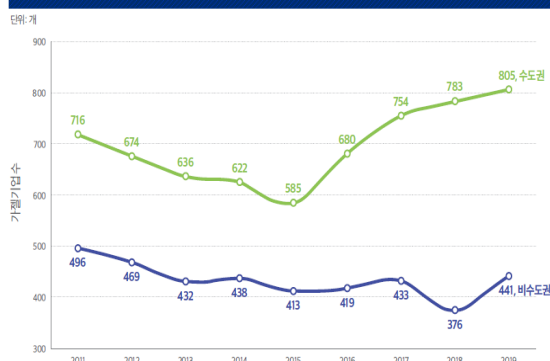
01. 경제영역 : 현황

✓ 기업분포 지역격차

- 가젤기업과 혁신기업 규모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은 비중을 점유.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서도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놓고 있음

민생토론회(2407.22): 농업외연확장, 농업에서 **농산업**(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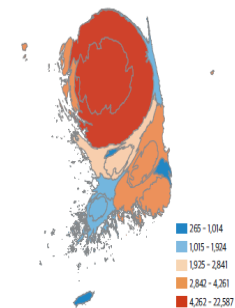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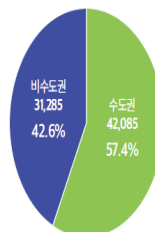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젤기업수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기업 격차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혁신기업체 수 비교

2019년 사·도별 혁신기업 업체수 카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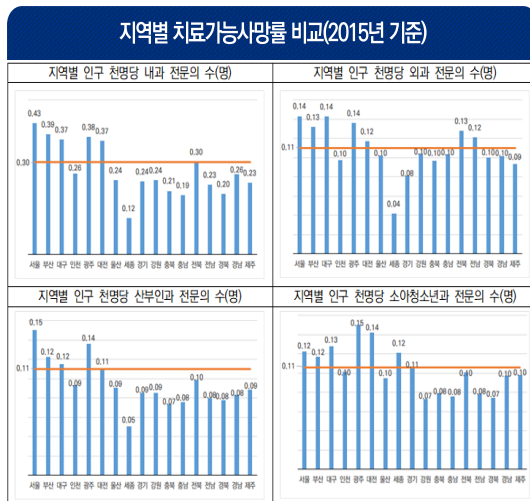
주: 가젤기업은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기업
자료: 김태환 외(2021). 지역별 고용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브리프, 국토연구원, 재인용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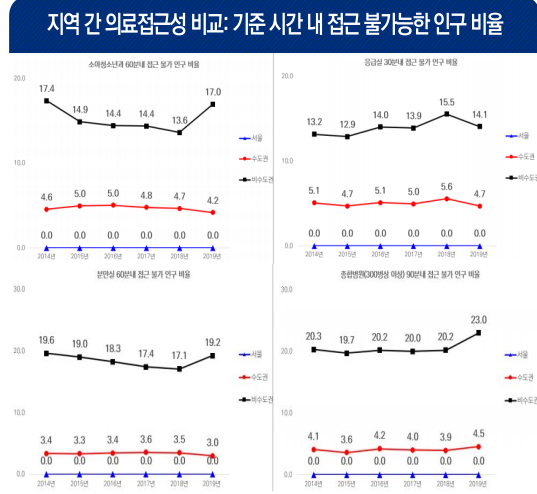
02. 보건복지영역 : 현황

✓ 보건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 지역간 서비스 격차 축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지역의료 인프라, 비대면진료 등



자료: 강해규 외(20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수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자료: 하수정 외(2021), 지역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협동보고서(부문편), 국토연구원, 재인용

15

02. 보건복지영역 : 현황

✓ 지역별 빈곤 격차

- 지역별로 서로 다른 빈곤격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필요성

→ 지역내 사회안전망 강화,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필요

보건복지영역 지표는 통계청, 관계부처에서 생산 중. 하지만 결과(outcome)측정 데이터는.

지역별 빈곤율 변화(시장소득) (단위: %)								
	전체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경남/ 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2011	18.0	13.4	14.8	18.4	25.2	16.3	24.9	25.0
2012	17.2	14.8	13.4	16.9	25.7	12.5	23.0	24.1
2013	18.7	15.1	14.4	18.2	29.5	15.4	22.9	27.2
2014	18.0	13.5	14.7	18.9	26.0	17.0	23.2	23.9
2015	17.9	15.3	14.6	16.6	22.6	18.1	22.8	25.3
2016	18.0	14.4	14.3	17.7	24.0	19.8	23.9	24.1
2017	17.8	15.1	12.9	18.5	24.6	19.6	23.6	23.6
2018	18.6	15.3	12.3	21.7	25.4	20.8	28.5	24.5
2019	18.3	15.3	12.7	21.2	24.4	22.3	24.6	23.7
2020	19.5	16.2	13.9	22.4	23.9	24.2	30.9	23.7
2021	20.1	17.8	13.6	23.8	26.1	25.1	27.9	2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원자료, 저자분석

지역별 빈곤율 변화(가처분소득) (단위: %)								
	전체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경남/ 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2011	12.9	9.6	10.4	12.1	18.3	14.1	17.2	18.1
2012	13.0	10.8	10.4	11.6	17.7	10.5	18.7	19.7
2013	14.2	10.3	11.1	12.5	22.8	11.9	20.2	21.5
2014	12.4	10.2	10.3	11.9	16.5	11.5	17.9	16.4
2015	12.4	10.7	9.7	10.7	18.3	11.8	15.8	18.0
2016	12.6	10.4	10.2	11.7	15.7	13.6	16.6	18.1
2017	12.4	9.4	10.0	10.7	16.6	15.1	15.2	19.2
2018	13.5	10.9	9.2	14.8	19.4	14.4	18.9	18.6
2019	13.4	10.9	9.8	15.9	17.0	15.1	16.9	17.6
2020	13.5	10.9	9.6	15.8	17.0	14.0	20.8	18.1
2021	13.1	9.5	9.9	15.1	16.7	16.6	17.3	17.9

16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03. 문화공동체영역 : 지표설명



☑ 문화공동체영역 지표 및 내용

농어촌 삶의 질 지수 : 문화공동체영역	
구분	내용
문화공동체영역	삶의 만족도
	정의 -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정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0점 척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자료로 2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도 또는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문화시설 접근성
	정의 - 지역 내 주민의 문화시설 이용까지 소요되는 접근성(시간)을 측정하여 지역별 문화여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농어촌 주민 거주지역에서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최단도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시간
	측정 - 도로망상 지표와 CB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을 산출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500m 공간단위로 연간 1회 제공하는 인구주택 가토와 CBS 네트워크 분석 활용
	사회활동 참여율
	정의 - 지역별 사회활동 참여인구를 측정하여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규모와 사회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 경제, 문화 분야 단체와 지역 진흥 교육단체 등
	측정 -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활동에 1회 이상 직접 참여한 경험인 1 있는 인구 비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5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가족관계만족도
	정의 - 완전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역별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를 통하여 지역별 가족과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측정 -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약간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자료로 2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도 또는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자료: 농어업위(2023),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재인용)

- 문화공동체영역 지표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삶의 만족도** : 전체지표와 맥을 같이하는 지표로 농산어촌의 변화와 주민 생활 변화를 반영
- **문화시설 접근성** : 지역사회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소득 등과 더불어 문화소외, 배제를 해소할 필요
- **사회활동참여율** : 지역사회 통합, 농산어촌 문화 계승 등을 위한 기본 지표로 평가에 활용
- **가족관계만족도** : 다문화, 고령화 등 농산어촌 사회 변화 속에서 소홀해가는 가족간의 유대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평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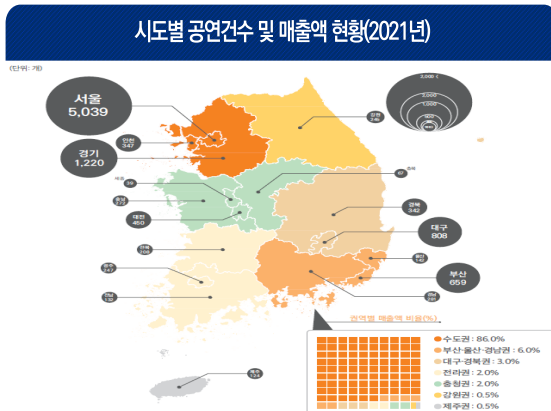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03. 문화공동체영역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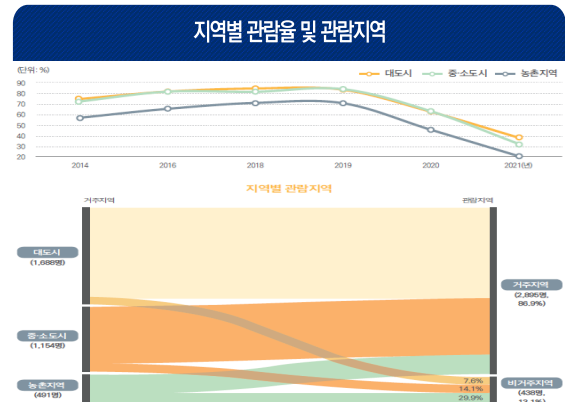


☑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 시도별 공연건수나 매출액에서 서울 등 도시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방의 경우는 낮은 수준을 보여줌
- 코로나 이후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율은 감소추소, 농어촌지역은 더욱 낮음. 특징적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경우 본인 거주지역보다는 도시에서의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음



자료: 하수경외(2024), 지역간 삶의 질 격차,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브리프, 국토연구원(재인용)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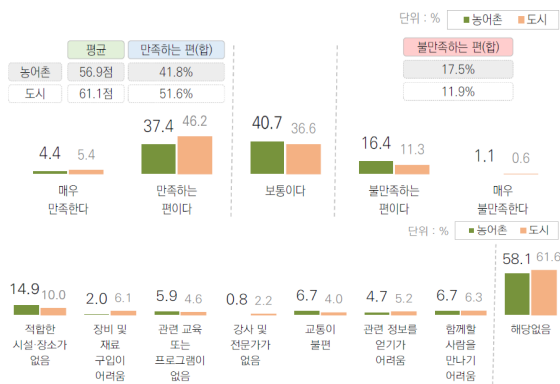
03. 문화공동체영역 : 현황

✓ 농어촌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으며, 불만족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 : 단양만중리 대학로 극장-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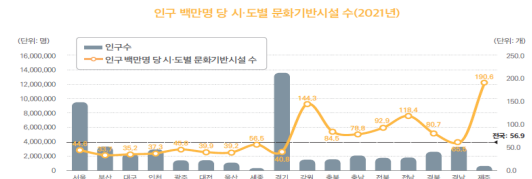
농촌주민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및 제약요인



자료: 국립농업과학원(2023). 2023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재인용)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제약요인으로는 장소와 시설 부족, 교통불편, 함께할 사람 없음(고령, 1인가구 등 영향), 프로그램 부족 등을 지적

- 문화시설 기반은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실태와 주민 인식간에 격차가 발생이유는 접근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비율 등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19

04. 환경안전영역 : 지표설명

✓ 환경안전영역 지표 및 내용

농어촌 서비스 기준	
구분	내용
환경안전영역	빈집 정의 -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설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지역별 빈집 유무는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 안전, 경관 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측정 - 지역별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설의 비율 출처 - 통계청 빈집비율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사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지역안전도 정의 - 지역 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 분야별로 지역의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별 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연구에 활용 측정 - 지역별 6개 분야에 대한 상하등급(상·중·하)을 안전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연황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사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하수도보급률 정의 - 지역별 하수가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처리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하수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이 물과 섞여서 배출되는 것으로 지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측정 - 출안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출처 - 한국환경공단 하수도 통계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사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정의 -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이 적체시설에 적정한 시간에 맞추어 폐기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폐기물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환경오염발생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 측정 -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출처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지역별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사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자료: 농어업위(2023).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재인용)

- 환경안전영역 지표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빈집** : 인구감소와 더불어 농산어촌의 빈집 증가는 지역환경, 안전 등과 맥을 같이하여 이에 대해 평가

- 지역안전도** : 늘어나는 사회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과 농산어촌 사회의 안전성을 평가

- 하수도보급률** : 농산어촌의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 농산어촌 경관보전, 환경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자체 노력 평가

20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04. 환경안전영역 : 현황



✓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통한 농산어촌 평가

- 보건 의료 및 복지, 교육문화 영역에 비해 **정주여건과 경제활동 영역은 국가최소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평가됨**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인 **하수도보급율, 생활폐기물** 등은 국가 최소기준과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2022년 기준)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점, %)	이행 상태
1. 보건 의료·복지	진료	치료를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 1시간	23.1점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13.8점
	영유아 보육·교육	치료를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 만·초·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9.1점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100%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치료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통학구과와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4점
	평생교육	읍·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83.5%
	문화	치료를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저장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정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1점
	도서관	치료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0점
	체육시설	치료를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6.6점

자료: 권인혜 외(2022), 202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점, %)	이행 상태
3. 정주여건	주거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럼(이)지역이 포함된 슬럼지역을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열거 기밀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34.8%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81.6%
	하수도	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5.6%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열파지(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5%	70.0%
4. 경제활동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한다.	100%	89.1%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생성·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생활/영농 100%)	76.6%
	방범설비	방치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을 폐쇄회로 텔레비전(7개년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가)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75.9%
	경철순회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의 순회를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95.4%
4. 경제활동	소방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69.1%
	장업·취업·건설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업·취업 관련 지원 센터에서 사업에 관한 장업에 관한 전문적인 건설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77.5%

주: 운영 표시는 비당성 항목임

21

PART.2 농어촌 삶의 질 지수와 현황

04. 환경안전영역 : 현황



✓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본 안전진단

여성,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 범죄분야는 도시에 비해 군지역의 안전도가 높게 평가. 하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원과 관심이 필요
- 생활안전, 자살분야 등에서는 일부 군지역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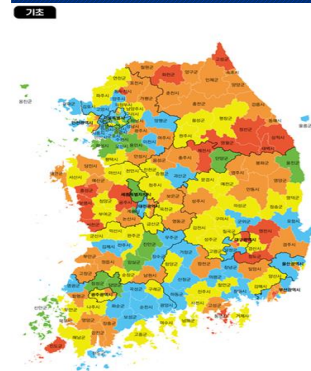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자살분야)



자료: 권인혜 외(2022), 202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인용)

22

05. 지역활력영역 : 지표설명

지역활력영역 지표 및 내용

농어촌 삶의 질 지수 : 지역활력영역	
구분	내용
지역 활력 영역	합계출산율
	정의 - 지역별 여성들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 파악하여 지역별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측정 - 대한인구 연구 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 중 출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출처 -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구증감률
	정의 - 지역별 인구증감, 감소를 평가하여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측정 - 전년도 인구수 대비 인구수의 증가 또는 감소 비율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청년인구 비율
	정의 -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측정 - 총인구 중 청년인구(19세~34세 이하)의 비율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총인구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교통접근성
	정의 - 집계구 중심에서 서비스(판매) 시설까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거리를 지표화
	측정 - 해당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접한 서비스(판매) 시설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출처 - 교통통계에서 연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1년 기준 자료 활용)

자료:농어업위(2023).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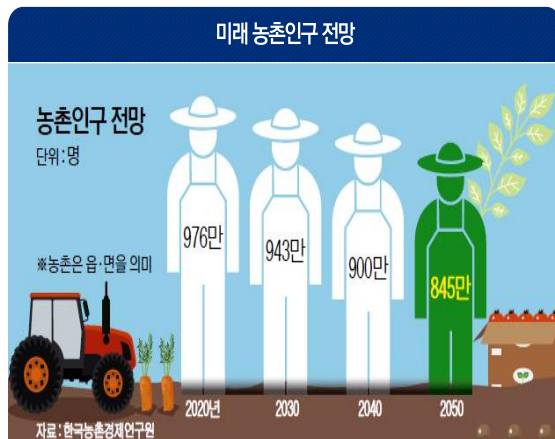
- 지역활력영역 지표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합계출산율** : 저출산 현상 심화속에서 농산어촌 인구조 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할 평가
- 인구증감률**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정책 을 평가
- 청년인구 비율** : 활력있는 농산어촌, 지속가능한 농산 어촌을 위한 청년지원을 위한 지자체 정책 평가
- 교통접근성**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 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노력과 정책 평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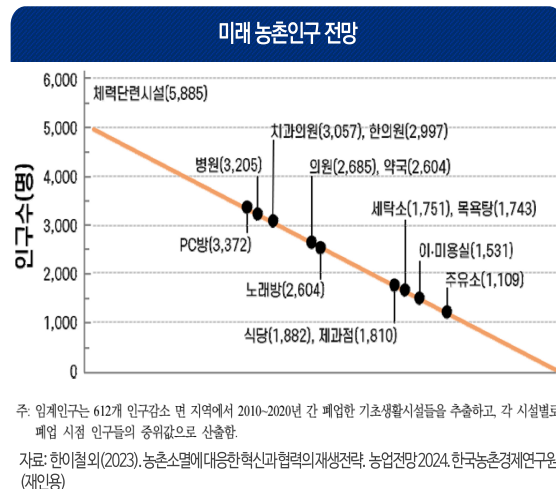
05. 지역활력영역 : 현황

농어촌 인구문제와 감소하는 생활인프라

- 농어촌 인구는 지속해 감소중이며, 2020년 976만명에서 2050년에는 845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
- 인구감소는 생활인프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2천명 이하로 감소시 병의원이 소멸되고, 인구 천명대이면 기본생활 시설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



자료:농민신문. [2023농업전망] 텅빈비는 농촌. 2023.01.18(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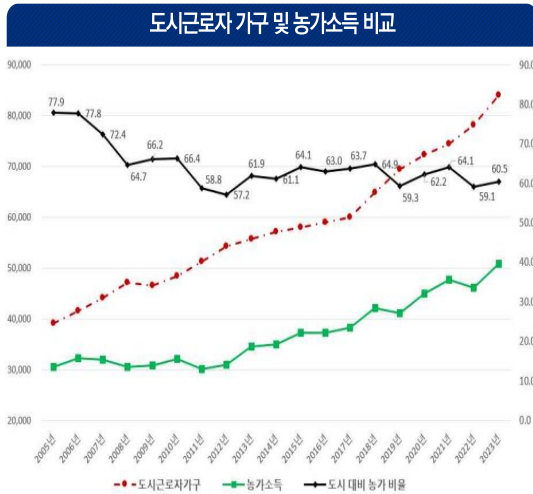


24

01. 농산어촌 주민 소득 증진

☑ 농산어촌 경제력 활성화 강화 필요

-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소득 간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60% 대 수준**을 유지 중



- 도시와 농촌 간 산업, 기업규모 등의 격차는 농가소득은 물론 농산어촌 주민의 낮은 소득에 영향

- 농산어촌 주민 소득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기업, 강소기업 등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

- 청장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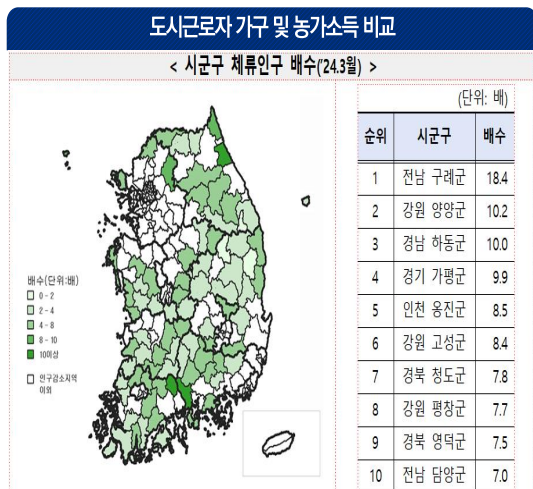
-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거, 교육, 필수지출(교통, 통신 등) 등

27

01. 농산어촌 주민 소득 증진

☑ 농산어촌 인구패러다임 : 생활인구로의 전환

- 농산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은 물론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 농산어촌 거주 주민에 비해 5배 이상의 생활인구가 지역으로 유입중

- 생활인구 증가의 영향은 농산어촌 주민 소득, 문화, 지역사회 통합 등에 긍정적 영향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등의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안전(사고,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농산어촌으로의 접근성, 장기체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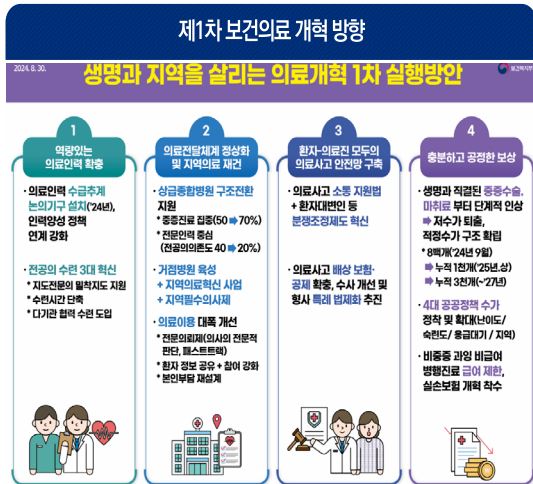
28

02. 농산어촌 주민 대상 사회정책 강화

✓ 도농 간 보건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

삶의 질 기본계획과의
적극적 연계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로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을 수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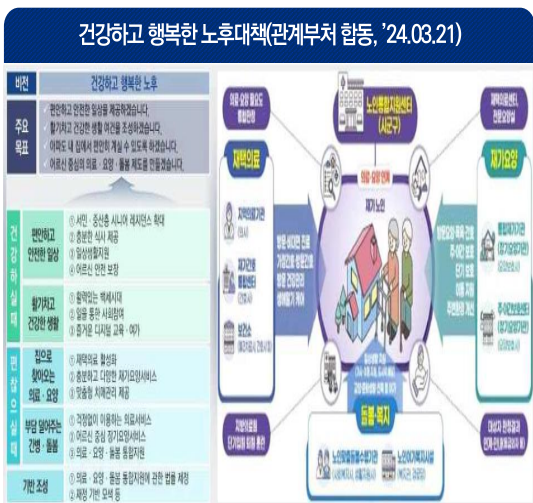
- 4대 개혁방안 중 하나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포함
- 기능 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기능정립 :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등 종별 역할명확화 및 기능정립 지원
 -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권역별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등
 - 지역인재전형 확대,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 확대, 지역필수의사제(의료특위 논의) 등
 -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 개혁방안을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02. 농산어촌 주민 대상 사회정책 강화

✓ '의료-요양-돌봄 지역돌봄의 시작과 대응

고령화 및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농산어촌 사회정책 변화 필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4. 2.29 제정



0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상 재정립

● 농어업위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최근 농어업위 존속기간이 2029년까지로 확대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취약성 내포
- 정부내 헌법상 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헌법상 기구 혹은 대통령직속 기구로의 전환 추진

● 실질적 집행력 확보 방안 마련

- 농어업위가 농산어촌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 부족
- ➡ 농어촌 삶의 질 계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등을 통해 농어업위 실행력 확보 방안 마련

31

03.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상 재정립

미래사회는 정보와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전환임.
농산어촌관련 DB 핵심기능 확보!!!!

● 농어업위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참여 강화 모색

- 농산어촌 관련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삶의 질 관련 계획은 농산어촌 주민 삶 전체에 영향을 줌에도 참여부처가 제한되어 있음(기재부,농식품부, 해수부, 국 무조정실, 식약처)
- ➡ 교육, 주거, 보건복지, 노동 등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련 부처로의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 농산어촌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자체와의 정책 마련, 협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력 담보
- 디지털 전환, 스마트 산업 등 대응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데이터 기반 구축 추진
- 삶의 질 지수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각부처 행정 DB 등과 연계사업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32

04. 미래 사회 변화 향후 정책 방향 대응

현정부 하반기 정책 Keyword: 양극화타개와 새로운 중산층 시대 개막(국정과제·사회이동성 강화)
 ▶ 농어업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대내외적 사회 변화

- **삼중 전환(최영준, 2024), 불안 사회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간 삶에 다양한 영향 중**

- **삼중전환 :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및 변화, 디지털 전환**

- **새로운 변화 : 양극화 및 격차(지속위기), 가족구조 변화, 정신건강, 위기의 중첩성 등**

▶ 기존 경제, 사회정책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대응방안,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

-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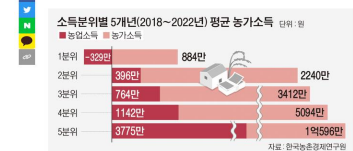
- **사회정책 방향 :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대응 위해 사회보험 중심에서 소득과 서비스 및 돌봄 보장 강화 중**

- **농산어촌정책 방향 : 대내외적 환경변화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 개편, 생활인구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농가 양극화 심화...농업소득 늘려야

일련: 2024-09-23 00:00 수련: 2024-09-23 00:00

1인 고향 영세농 증가한 탓
 안정적 은퇴기회 확대 필요
 소득원 다각화 정책도 필요



감사합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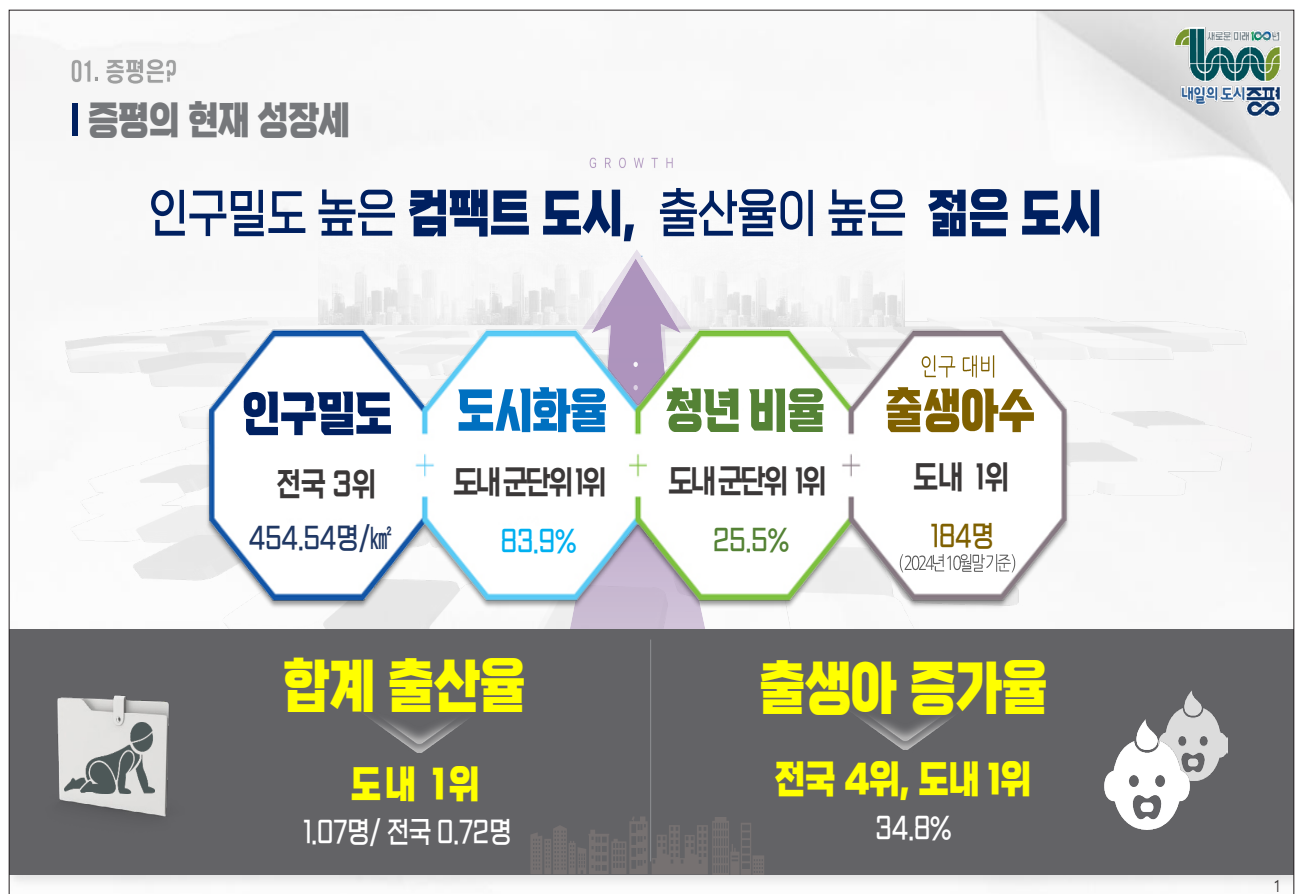
온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 ON 돌봄사업, 농어촌 활력을 ON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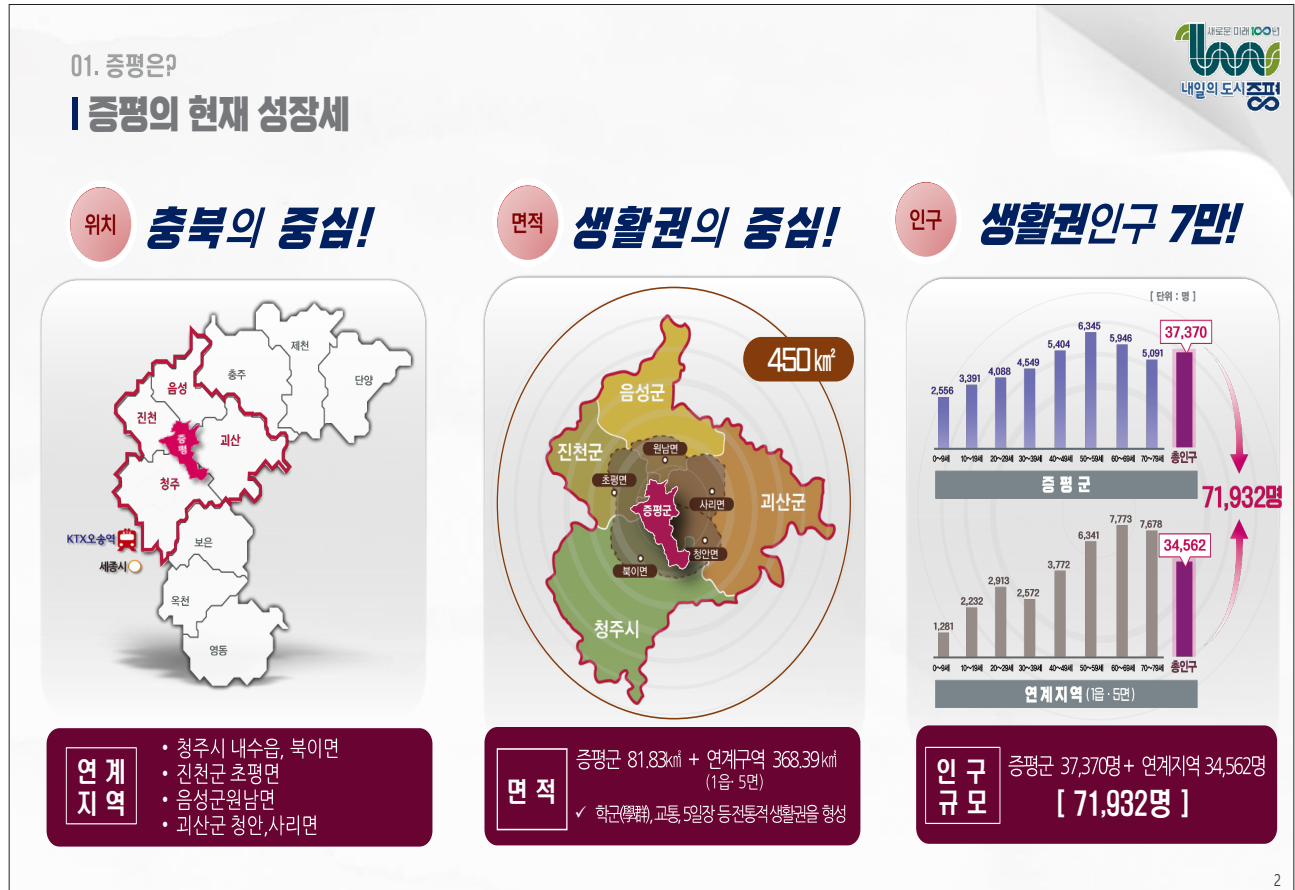
발제: 이재영 충북 증평군 군수



발표순서

- 01 ————— 증평은?
- 02 ————— 돌봄 전환시대
- 03 ————— 증평형 아이돌봄





02. 돌봄전환시대

돌봄에 대한 인식 대 전환

공간적 돌봄

>> 아이들을 공간에 가두어 돌봄

단순 서비스에서

{

복합적 요소 가미된 돌봄 아젠다 전환

}

✓ 사회적 돌봄으로

✓ 아동중심으로

✓ 공공성 강화

02. 돌봄전환시대

돌봄경제

누구나 필요한 돌봄 서비스로 전환

사회적 상호 의존성과 협력을 기반한 경제모델

일자리제공
경제활동 촉진

사회적연결망 형성
경험과
지식공유 소통

동등한 기회지원
사회적불평등완화
정의실현

심리적 안정과
웰빙 추구

새로운 경제모델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용품 제조
산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

0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돌봄 도시**,

증평형 아이돌봄

03. 증평형 아이돌봄

| 증평형 아이돌봄

① 맞춤형 돌봄정책

✔ 전담조직 구성과 제도 정비

- 전담조직의 구성 : 2022. 12. 31.
- ✓ 행복돌봄과 신설
- '증평군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 2023. 5. 4.
- 아이돌봄민관협의회 구성(11명) : 2023. 9. 1.
- 행복 온 (ON) 돌봄 5개년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정책발굴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기간 및 참여 : 2023. 1. ~ 2023. 6.
- 대 상 : 양육자, 돌봄활동가 및 전문가 등
- 방 식 : 그룹별 간담회, 돌봄정책 토론회, 설문조사 등

✔ 돌봄 전문가 양성

- 기 간 : 2023. 4. ~ 2024. 10.
- 참여 인원 : 78명 (경력단절여성 중심)
- 작은도서관 행복돌봄나눔터 교사: 30명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② 든든한 돌봄공간



누구나 어디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행복돌봄나눔터	9개
지역아동센터	4개
다함께돌봄센터	3개
증평 행복돌봄거점센터	1개
빈집 활용 어린이 놀이터	3개

상표 등록



행복돌봄 나눔터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② 든든한 돌봄공간



군청현관

행복돌봄나눔터 조성



조성전





24시간 돌봄가능 (영유아~초등학생까지)

- 긴급돌봄 핫라인 설치

03. 중평형 아이돌봄

중평형 아이돌봄 @ 든든한 돌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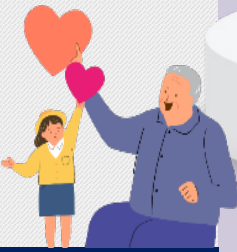


★ 경로당 어르신이 아이를 돌보는

작은도서관 활용

초롱이돌봄나눔터

- 지역공동체 조력자 주거행복지원센터(LH)
- 어르신과 재능기부자가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
- 24시간 365일 돌봄이 가능한 운영
- 재능기부 학습과 자원봉사 돌봄으로 사랑 실천
 - 인 원: 10명
 - 기부천사 재능기부: 영어·수학 학습 지도



주말개방!

온마을돌봄선도모델

지역확산!

8개 도서관

- 자발적 공동체 운영 기반 -

03. 중평형 아이돌봄

중평형 아이돌봄 @ 든든한 돌봄공간



📍 임신부를 위한 공간

J E U N G P Y E O N G

☑ 임신부 전용 보강천 쉽터



☑ 임신 출산 프로그램실(보건소)



☑ 임신부 문화센터(조성중)



> 1층 조성 예정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③ 든든한 돌봄공간



어린이를 위한 특화공간

J E U N G P Y E O N G

**반집을 활용한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 지속적 확충

**체육시설
어르신+어린이 체육공유공간**



☑ 세대간 함께 어울리는 곳

**증평 통합
행복돌봄거점센터**



☑ 행복돌봄나눔터 연계

12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④ 정성가득한 돌봄서비스



☑ 제도적 기반 마련

-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돌봄기관 야간 및 주말·공휴일 운영
- 영유아 병원동행서비스
- 아이돌보미 확대(2명 → 36명으로 증가)
- 행복 온(ON)돌봄 플랫폼

★

대기시간 제로!



방과 후 틈새시간 돌봄 운영

학원 등 대기시간 활용
학교근처 돌봄나눔터 마련

양육비 지원단 운영

고문변호사 활용
아동보호기관 등 구성

13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④ 정성가득한 돌봄서비스

☑ 긴급돌봄 운영 및 정기적 지원

- 아이돌봄추진단 180명
- 활동가, 자문단, 홍보단

☑ 여름·겨울방학 돌봄

- 프로그램 운영, 간식·중식제공
- 재능기부, 로컬푸드

☑ 마을 자체 공동체 운영

- 마을 어르신 자체운영반 편성
- 공동체 스스로 자원봉사

☑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 문화

- AI로봇 활용 돌봄프로그램 운영
(혁신제품사용 시범기관 선정)



14

03. 증평형 아이돌봄

증평형 아이돌봄

⑤ 궁극적인 목표

아이들은?

✓ 창의성과 독창성 있는 활동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곳!

부모는?

✓ 언제든지 믿고
말길 수 있는 곳!

지역사회는?

✓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곳!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없는 증평!

돌봄 이상의 돌봄

15

03. 중평형 아이돌봄

I 중평형 아이돌봄

★ 대외적 성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중평군,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지역
활력

충청북도
1위

✓합계출산율 ✓인구증가율

종합
지수

전국 군단위
1위

★ [여성가족부]

**중평군,
아이돌봄서비스 A등급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도내 유일
✓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 [행정안전부]

**중평군, 함께하는
행복 온마을돌봄으로
적극행정우수기관 선정!**

✓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함께하는 행복 온 ON 돌봄 추진
행복하고 따뜻한(온) 중평형 돌봄에 스웨치(ON)를 켜다.

주요내용 충청북도지자체장협의회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024. 12. 10. 충청북도지사서훈)

주요내용 충청북도지자체장협의회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024. 12. 10. 충청북도지사서훈)

주요내용 충청북도지자체장협의회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024. 12. 10. 충청북도지사서훈)

16

- 55 -



사례 2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발제: 신애정 강원 정선군 보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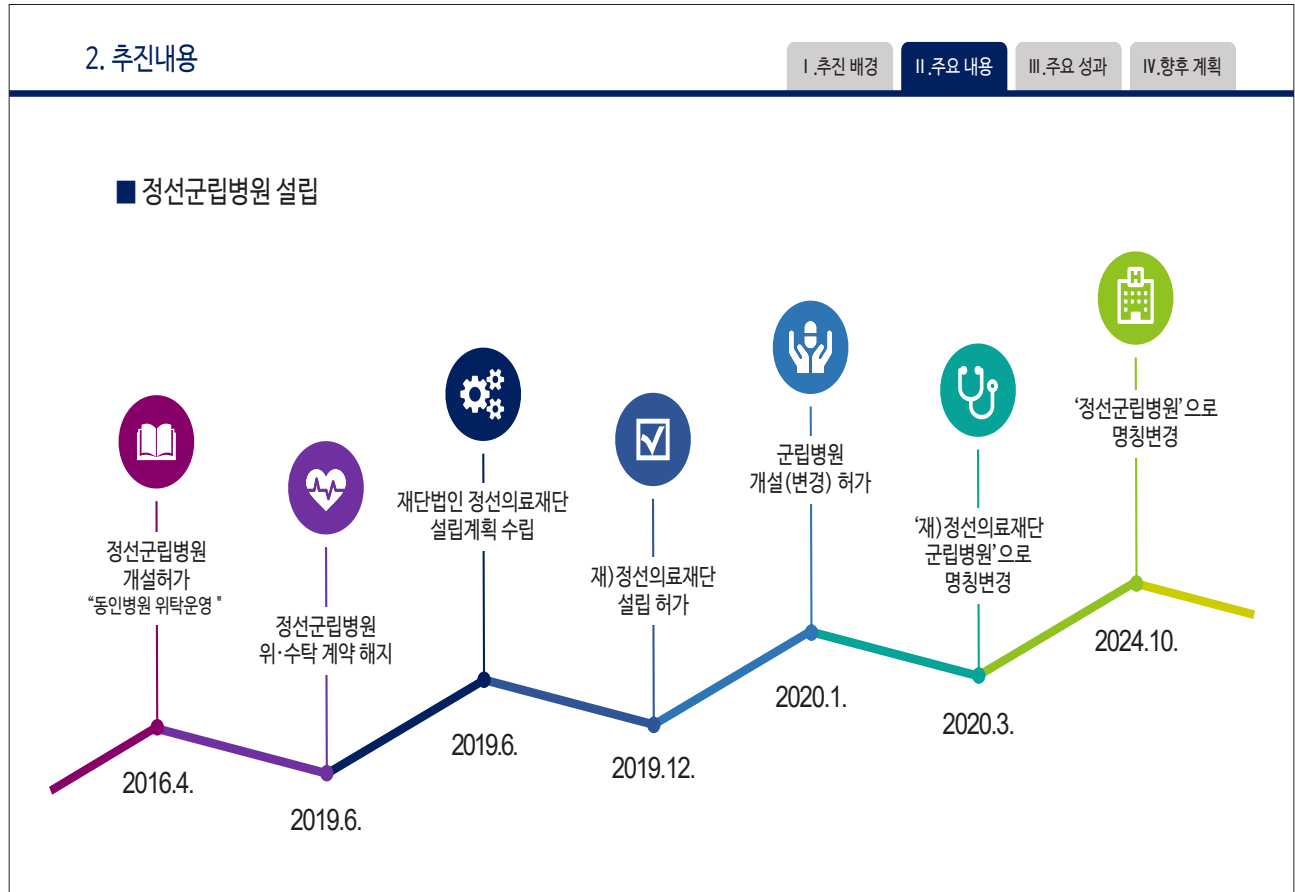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정선군립병원 설립

- Ⅰ 추진 배경 _ 지역 현황
- Ⅱ 주요 내용 _ 사업개요 / 추진내용
- Ⅲ 주요 성과 _ 정선군립병원 성과
- Ⅳ 향후 계획 _ 향후 추진 계획 / 과제









2. 추진내용

I. 추진 배경

II. 주요 내용

III. 주요 성과

IV. 향후 계획

■ 지역맞춤형 진료과목 확대

정선군립병원 본관동
2024.10.23 개소

본관동 개소에 따른 진료기능 확대

기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증설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확대, 인공지능장실 확대, 재활치료실 신설, 정신건강의학과(계획)

기타과목

신경과, 비뇨기과, 피부과 월1회 진료 지원
※ 중앙대학교 병원 업무협약(23.5월)

기타운영

응급실, 수술실, 영상의학실, 장례식장, 인공지능장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2. 추진내용

I. 추진 배경

II. 주요 내용

III. 주요 성과

IV. 향후 계획

■ 지역맞춤형 진료과목 증설

2022.2월부터
인공신장실 운영 중
10병상 → 15병상 확대

강원도민일보

HOME > 지역 > 정선

정선군립병원 인공신장실 개설 원거리 진료 불편 해소

A 유수현 | @ 승인 2022.02.21 | 12 16면

혈액투석기용급장비 등 갖춰

▲ 정선군은 최근 정선군립병원에 인공신장실을 개설해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불편을 해소했다.

정선지역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불편이 해소됐다.

정선군은 지난 16일부터 정선군립병원에 인공신장실을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선군립병원 인공신장실이 개설됨에 따라 지역 내 69명에 달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원주, 강릉, 태백 등 타 지역으로 원거리 진료를 받는 불편이 해소됐다. 인공신장실은 3억여 원을 들여 95㎡ 규모에 10개의 병상과 간호사실, 정수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2. 추진내용

1. 추진 배경

II. 주요 내용

III. 주요 성과

IV.향후 계획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 1 코로나19 확진 투석환자의 투석 치료 실시 (29건)
- 2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운영 (5,173건)
- 3 대면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운영 (976건)
-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지원 (16,720건)
-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10,013건)



2. 추진내용

1. 추진 배경

II. 주요 내용

III. 주요 성과

IV.향후 계획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란?

의료·보건기관 원격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주거지 중심의 의료 체계

사업규모 시군 연계협력사업
(운영총괄: 강원테크노파크)

대상지역 평창군, 평창보건의료원(주관)
정선군,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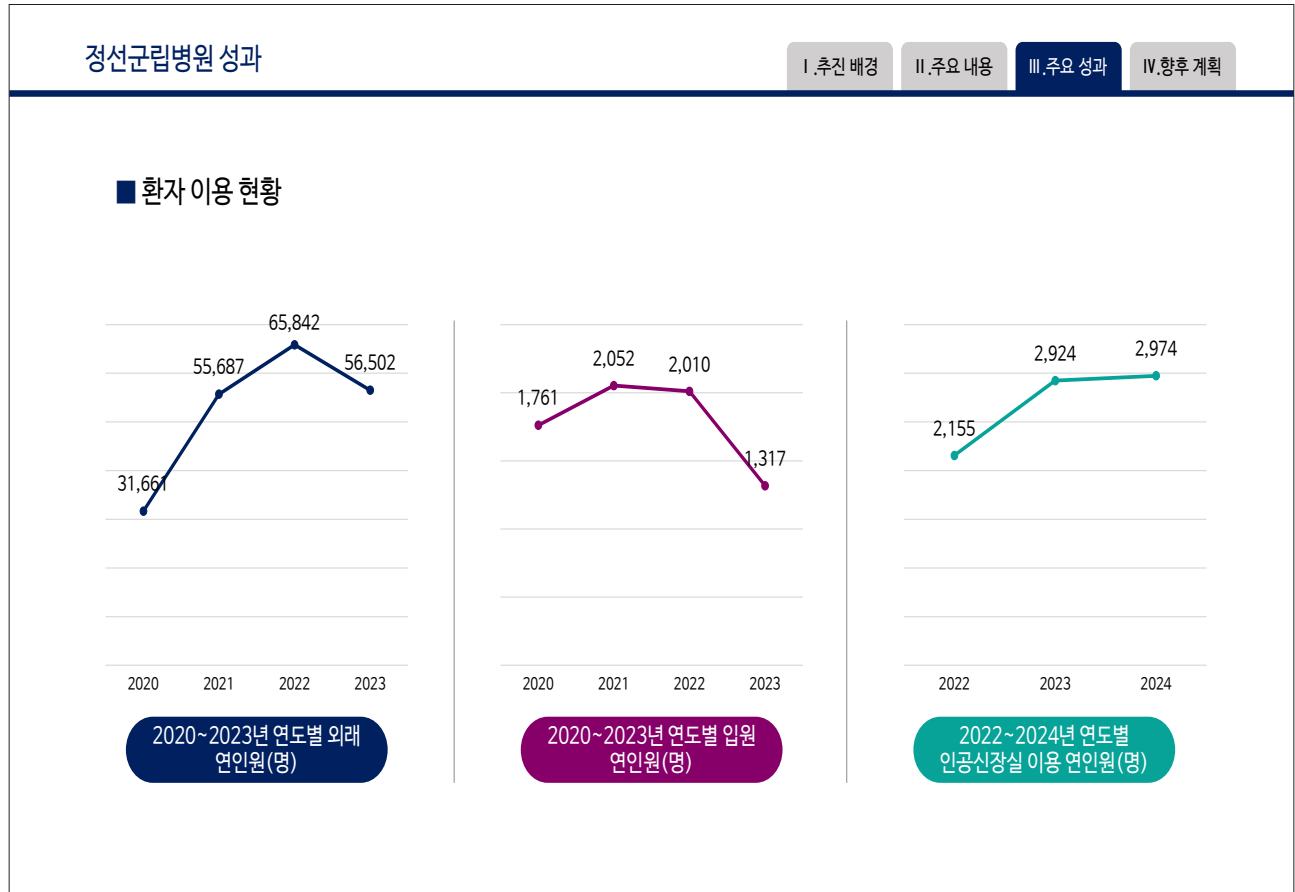
사업기간 2022. 10월 ~ 2026. 12월

협진기관

강원대학병원
한림대학병원
중앙대학병원

사업내용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향후계획

I. 추진 배경

II. 주요 내용

III. 주요 성과

IV. 향후 계획

■ 과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 정부에서 지역별 의료자원 수요 분석하여 균형 배치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조항 개정
- 의료인이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 시행

환자이송체계 구축

-가점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

재정적, 인적 자원 근거 마련

-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울진군립병원, 진안의료원 등 군립병원 간 협력

정선군립병원과 함께 한 이야기

최규환
사복을 통색환자
서울 생활을 오래 했죠

정선군립병원에서 인터뷰

정선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글 일부 발췌

- 68 -



정선군은 군민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